

삼겹살 얻어 먹었다... 1인당 55만원 과태료

해남 유권자 49명 총 2700만원 '폭탄'

광주·전남 선거법위반 급증... 선관위 226건 적발

지난 8일 오후 해남군 황산면 모 식당에서 지역민 64명이 삼겹살을 얻어 먹었다가 이 중 49명이 2700여 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이들은 전남지역 모 입후보 예정자 지지자인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삼겹살 한번 잘 못 먹었다가 1인당 5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A씨는 공식선거법 혐의(기부행위 제한)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됐으며, 선관위는 A씨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추가 확인·조사해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이번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 처분은 광역 선거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조치된 것이며, 선관위는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흥군 주민 B씨는 지난해 9월 군의원 C씨부터 우체국 택배를 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낭패를 봤다. 선거철도 아니고, 추석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없이 선물을 받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이다.

전남도 선관위는 출마예정자 B씨로부터

1만4900원짜리 선물을 받은 고흥군 주민 64명에게 946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석선물세트 하나 잘못 받았다가 한 사람 당 15만원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술·음료·식사 제공을 받았다가 받은 액수의 30배에서 최대 50배를 내야하는 이른바 과태료 폭탄을 맞은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는 46건, 전남은 180건 등 총 226건을 적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132건(광주 29건·전남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물·시설물 관련이 61건(광주 8건·전남 53건)을 차지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도 9건(광주 4건·전남 5건)에 달했다.

또 문자메시지 이용 3건(광주 1건·전남 2건), 허위사실 공표 2건(광주·전남 각 1건), 자치단체장 행위제한 2건(광주·전남 각 1건) 등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고발 17건(광주 9건·전남 8건), 수사의뢰 6건(광주 2건·전남 4건), 이첩 2건(전남), 경고 201건(광주 35건·전남 166건) 등이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초대에 응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법 위반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는 사소한 식사 약속이라도 모임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정당 후보자와 관련된 식사대접은 거역의 과태료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렬기자 kroh@kwangju.co.kr

알기쉬운 선거법 (4)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예비후보자만 어깨띠·표지물 착용 가능

-어깨띠 및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깨띠·표지물 착용할 수 있는 사람은=예비후보자만 착용이 가능하다. 그 밖의 소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 어깨띠와 표지물, 법정 규격 범위의 마스코트, 표찰, 수기 등을 일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표지물 규격과 제작·사용 방법은=어깨띠(길이 240cm·너비 20cm 이내) 또는 표지물(길이 100cm·너비 100cm이내)의 규격은 정해져 있다. 그 밖에 제작·작성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규격 범위 내라면 그 형태는 반드시 사각형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질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표지물 규격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선거운동용 클립을 새길 수도 있고, 어깨띠를 그 규격범위 내에서 마라톤 등 번호와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로 제작·사용할 수도 있다.

보조기구 없는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우 보조기구(전동휠체어 또는 수동휠체어)에 표지물을 부착하는 것도 착용으로 보기 때문에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여러 개의 어깨띠(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함께 착용)를 착용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한 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을 방문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이밖에 아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않은 특이한 복장(요리사·의사·산타복장 등)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LED 등 발광장치를 이용해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 잘 보이게 제작·사용하는 행위,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도 모두 가능하다.

◇어깨띠·표지물의 게재 내용=어깨띠·표지물에는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 게재가 가능하다.

“생활임금제 전국 확대 선거 출마자 공통 공약”

장병완 민주 정책위의장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9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인상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생활임금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전국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끼도 먹을 수 없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나 행정명령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중에는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가 자치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제를 도입, 현재 최저임금보다 31% 많은 시급 6852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언급조차 없어 사실상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민주당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 토론회

19일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유권자의 이해와 실천을 기대하며’를 주제로 열린 6·4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려해상~섬진강~지리산 연결 산·강·바다 탐방

‘한섬지 천리길 실크로드’ 운영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공원사무소는 22일부터 한려해상공원, 섬진강, 지리산을 잇는 ‘한섬지 천리길 실크로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호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가 추진하는 한려해상-섬진강-지리산권 녹색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 탐방 프로그램에는 한려해상권 2곳, 지리산권 3곳의 국립공원사무소가 참여한다.

한려해상, 섬진강, 지리산의 첫 자를 탄 ‘한섬지 실크로드’는 지리산 둘레길, 섬진강

길, 남해 바레길, 이순신길, 바다백리길 등을 연결함으로써 산, 강, 바다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22일 구례 지리산 둘레길(산수유길)에서 시작하며 10월 18일까지 매주 셋째 주 토요일에 구례, 하동, 산청, 사천, 남해, 통영 등지의 국립공원 둘레길을 탐방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희망하는 날짜 2주일 전까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곳의 국립공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와 한려해상공원사무소(055-860-5800) 등 5곳의 국립공원사무소로 하면 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한·미·일 ‘핵안보 3자 정상회담’ 가능성

日총리 “고노 담화 계승” 밝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내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북한의 정부 소식통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26일로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 4월초로 연기한 점을 들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며 “제반 여건이 허락한다면 핵안보정상회의에 출석해 미래 지향적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한국의 한 소식통은 “한일 양자회담은 당장 힘들지만 미국의 한일간 화해 요청이나 일본의 성의표시 등을 감안하면 한미일 3자

회담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면 의제조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상황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헤이그 3자회담에 대한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만약 한중일 3자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핵 및 동북아 정세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개발,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정세 등에 대한 점검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3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성사되더라도 국제회의 무대에서의 3자회담이라는 성격상 깊이있는 대화보다는 현안을 점검하고 오랜기간 경색됐던 한일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한편 우리 측과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아베 총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29P - 10/12/13층, 3세대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9/13층, 2세대,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1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으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권리분석 등 정보 제공